

“전범기업 배상 없는 굴욕”... 윤 정권 강력 규탄

지역 정치권·시민단체 거센 반발

민주 광주시당 “치욕스러운 날”
“피해자 모욕하고 가해자 면죄”
시민들 “사과하고 전범기업 배상”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 보상을 한국 기업이 하도록 한 ‘제3차 변제 방식’을 확정 한 것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를 담은 강제징용 해법을 다시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6일 안평환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가 환영하는 최악의 굴욕 외교로 치욕스러운 날이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3월1일 104주년 3·1절 경축식에서 가해자의 자기 변호 논리를 꺼내 들며 일본을 두둔하고 순국선열을 욕되게 하더니 급기야 일본 정부가 환영하는 내용의 결정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당은 “국익을 위한 결단이었다고 항변하는데 대체 어느 나라 국익을 위한 결단이나”며 “국민에게는 어떤 것도 책임 지려 하지 않으면서 일본에겐 한없이 굴욕적인 정부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배상 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3차 변제 방식은 국격을 무너뜨리고 일본의 잔인한 침탈에 고개 숙이고 굴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부는 굴욕적인 친일 굴종 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을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22명은 “가해자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명백한 외교적 실패이자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 국민의 눈을 교묘히 속이는 친일 매국 조치

일 뿐이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다”고 전했다.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도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굴욕적인 해법이고 외교 대참사다”며 “피해자는 모욕당했고, 가해자는 면죄받았고, 국민은 치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배상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주는 일이다”며 “자식

이 강도를 당했는데 아버지가 나서 강도에 용서해주겠다고 무릎 꿇고 매달리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비난을 쏟아냈다.

시당은 “대일 굴욕 외교의 결정판이자 완전한 외교 실패다”며 “정부의 발표로 주권 국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동원 문제 해법의 핵심은 일

본 정부의 직접 사과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이다. 이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요구다”며 “윤 정부는 이와 정반대의 안을 내놓았다. 한국 정부의 자발적 굴욕이다”고 꼬집었다.

시민사회 역시 분노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왜 피해국인 한국이 대신 변제해야 하느냐”며 “제3차 배상안은 대한민국 행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한 ‘사법 주권의 포기’이자 자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 ‘제2의 을사늑약’이다”고 성토했다.

여수시민 강요한(28)씨는 “지금까지 정부는 ‘합리적인 배상안을 찾겠다’는 이유로, 수많은 피해자를 오랜 시간 고통스럽게 했다”며 “왜 해당 문제에 대해 주체인 일본과 전범 기업이 아닌, 우리나라 재단이 보상해야 하는 건가. 국가가 내린 답은 되레 이들을 더욱 처절하게 만들었다. 자국민으로서 몹시 개탄스럽다”고 하소연했다.

광양시민 신승현(27)씨는 “정부는 ‘제3차 변제’로 이 사안을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 이는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다”며 “이런 식이면 과거 위안부 추속 합의와 무엇이 다른가. 일본의 구체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 등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선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나·정성현 기자

대법 “일본기업 책임” 판결에 日 ‘수출규제’ 조치

강제징용 등 한일 청구권사

한국 정부는 일본과 수십 차례의 예비 회담·정치회담 등을 거쳐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 및 그 부속협정인 청구권협정 등 체결했다. 청구권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청구권 문제 해결, 경제협력 증진에 합의했다. 또 10년간 무상으로 3억 달러, 유상으로 2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청구권 자금을 따른 국내 보상을 위해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1966년 2월),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1971년 1월),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1974년 12월)’ 등 관련 법률을 제정한 후 1975~1977년간 보상을 실시했다.

정부는 피징용사망과 재산 손해 등 8만 3519건에 대해 약 92억원(청구권자금 무상 3억 달러의 약 9.7%)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인명보상(피징용사망자)은 1인당 30만원, 재산보상(예금·채권·보험금 등)은 신고금액 1인당 30원 수준이었다.

이후 2004년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외교문서공개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이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간공동위원회’는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했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조사 신청·접수를 진행했고, 총 7만8000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지급했다. (올해 2월말 기준) 사망·행방불명자 유족에게는 2000만원, 부상·장해 300만~2000만원, 미수급 지원금 1인당 2000원 환산 지급, 의료지원금 연 80만원 등의 수준이었다.

1990년대 초부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에서 일본 정부와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 패소했다. 2000년부터는 일본 기업 중 한국에 지사가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서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012년 대법원은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는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다루지지 않았으므로 배상 책임은 일본 기업에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해 1억원 배상 등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신일철주금 등은 재상고했고, 2018년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현재 확정 판결 3건 중 2건은 일부 현금화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됐다. 또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효력을 통보하면서 한일 관계는 경색 국면으로 치달았다. 이어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적교류가 단절되면서 더욱 경색됐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날 일제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에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전범 기업의 피해 배상이 빠진 대신 재단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뉴스



고퀄리티(4K)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 편집

드론타임 DRONE TIME

스포츠행사 / 축제 / 산업현장 / 호텔 / 펜션 학교 / 부동산광고 · 분양 / 지적도 선박특수촬영 / 생신시설 / 양식장 아파트 / 교회 웨딩 / 이벤트 / (웹)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

한정승인 공고

공고인은 망 정상남(1934. 09. 04.생)의 상속재산의 상속한정승인자로 민법 제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65조의 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을자는 공고일내에 채권또는 유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아 래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3 단단 77 상속한정승인

공 고 인 : 서영석(1960. 07. 05.생) (전화 : 010-6362-5664)

한정승인 심판문 결정일 : 2023. 02. 16.

한정승인 심판문 송달일 : 2023. 03. 02.

공고기간 : 2023. 03. 07. ~ 2023. 05. 06.

태양광 발전사업 사전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5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 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전소의 명칭 : 배규태, 순조태양광, 현미태양광, 세지4호, 세지5호, 부경태양광, 모두사랑, 본사랑, 세지9호, 송산발전, 해사랑, 구산태양광발전소, 흑암발전소3호, 정민태양광, 우이태양광, 세지16호, 세지17호, 세지18호, 숲, 후레지아
- 발전소의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10-22, 135-60, 135-61, 135-62, 산78-2
- 발전소의 면적 : 21,589㎡
- 발전사업의 내용 : -발전설비용량 : 99.96Kw -전체설비용량 : 1,999.2Kw -사업개시예정일 : 2024년 1월 1일 -사업운영기간 : 2024년 1월 -2049년 1월 (25년간)
- 발전사업 허가신청자 : 배규태, 강순조, 조현미, 황인상, 정순남, 허부경, 유대석, 송윤순, 박영욱, 양홍만, 임순화, 임순남, 박강락, 최영숙, 백영기, 주보인, 최봉수, 최교인, 조복금, 신혜현
- 의견제출기간 : 2023년 3월 10일 ~ 2023년 3월 17일 (7일간)
- 의견제출 방법 : e-mail : sc6902@naver.com 팩 스 : 0502-797-6902 전 화 : 061-332-6902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명당(穴)을 만드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 (6개월 과정)
· 일 시 : 2023. 3. 8(수) 오후 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 478-1) (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 수강료 : 풍수+사주 20만원 (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 2023. 3. 1(수) 오후 7시.
· 장 소 : 상 동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 00명)

컨설팅 (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 (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 (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 (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2246-1508

주재기자 모집

당사는 지역언론을 선도할 진취적이고 창의적 이상을 갖춘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지역 및 인원

지 역	고흥, 담양, 보성
인 원	각 1명

제출서류

- 이력서(연락처 명기)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기소개서 1부

접수마감 및 접수처

- 접수마감 : 채용시 마감
- 접 수 처 : 우편 접수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전남일보사 경영본부

이메일 접수 - recruit@jnibo.com

■ 기타 사항은 ☎(062)510-0421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全南日報